

KIRI 세미나

초위험 사회의 포용보험과 보험산업의 역할

이재연(보험연구원 연구위원)

2026. 7.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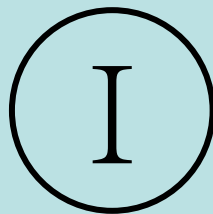
목 차

I. 포용보험의 필요성

II. 포용보험과 보험산업의 역할

III. 보험업계의 실천과 포용보험 정책 현황

IV.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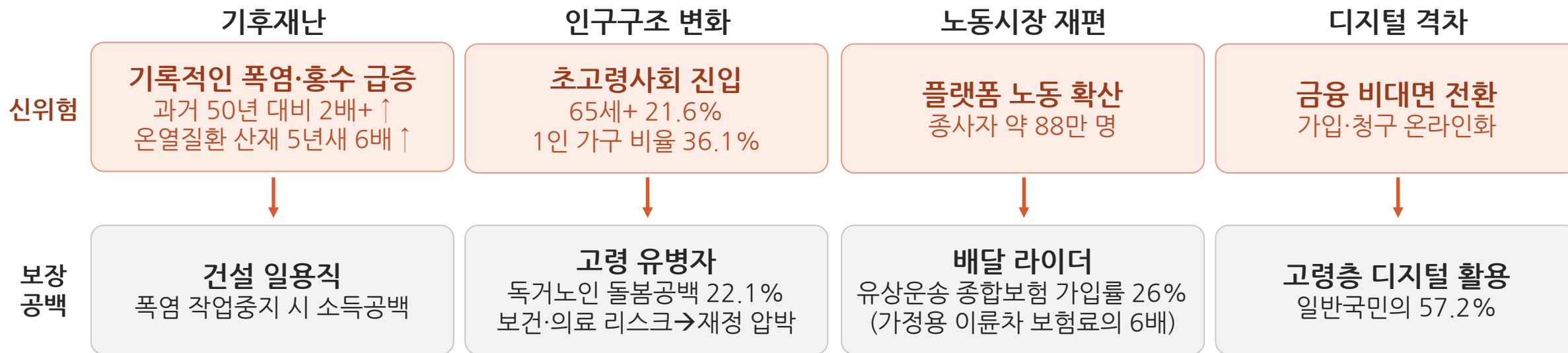


포용보험의 필요성

1. 초위험 사회로의 전환
2. 초위험과 전통 보험원리의 한계
3. 취약계층과 보장공백

1. 초위험 사회로의 전환

- 오늘날 사회는 이질적 위험이 동시다발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다중위기(Polycrisis) 초위험 사회**로 진입함
 - 과거에 없던 **새로운 위험**이 등장하고, **위험의 구조** 자체가 **바뀜**
 - 윌리엄 벡의 '위험사회'가 더 다양하고 거대한 초위험 사회로 심화됨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 7. 2.; 2024. 8. 5.), 국가데이터처 「장래연구추계」(2026),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과 (2024),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5. 12. 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NIA,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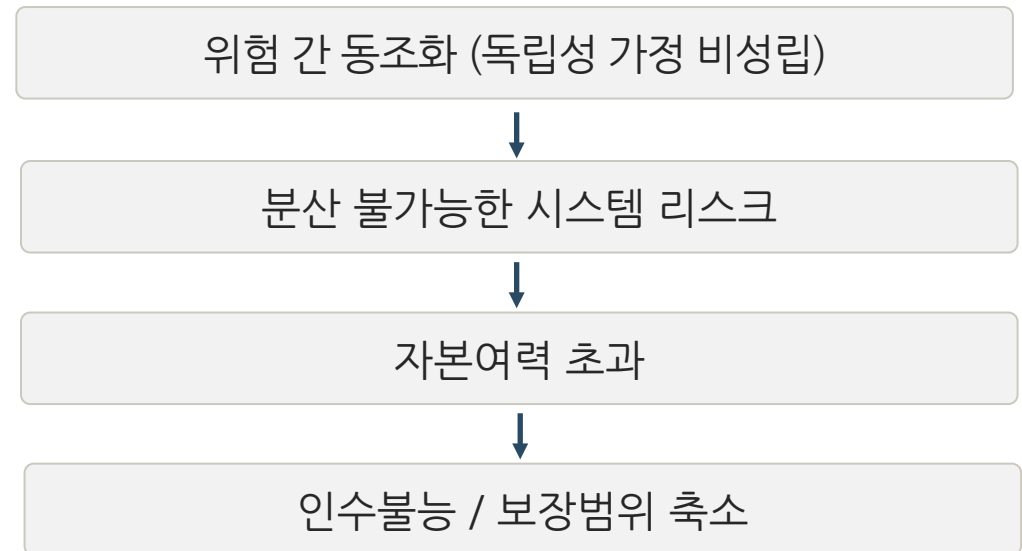
2. 초위험과 전통 보험원리의 한계

- 신위험·바뀐 위험구조는 전통적 보험의 전제인 **예측·분산·독립성**을 무너뜨려, 개별 **민간이 홀로 인수하기 어려운 공백**을 만듦
 - 시장 스스로 채울 수 없는 영역으로 남음

초위험의 특성

- **예측의 한계** (손해 이력이 없는 신종 위험)
 - 기후재난·디지털 위험은 과거 데이터가 없어, 계산 가능한 리스크가 아닌 불확실성
- **분산의 한계** (거대하고 동시다발적인 위험)
 - 피해 규모가 크고 동시다발적이어서 손해를 넓게 분산하기 어려움
- **독립성의 한계** (위험의 역진성)
 - 위험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아 동조화되며, 대비 여력이 없는 계층에 편중됨

초위험 대입 시 전통 보험원리



3. 취약계층과 보장공백

· 위험의 변화는 사회 전체가 함께 겪지만, 그 손실은 **대비·회복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 집중됨**

- 위험 노출은 큰 반면(위험한 노동·주거), 이를 감당할 소득·자산은 부족해 한 번의 충격이 오래 남음
- 보험이라는 대비 수단마저 공급·수요 양측의 제약으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함

공급측 장벽

· **인수 (위험의 선별 및 배제)**

- 사고 위험이 높거나 손해 데이터가 없는 경우 요율 산정이 어려워, 언더라이팅 단계에서 가입이 거절되기 쉬움

· **상품 구조 (경직된 요율)**

- 소득이 불안정하고 유동성이 낮은 계층을 위한 유연한 상품의 공급이 부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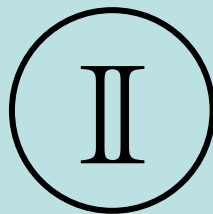
수요측 장벽

· **지불 여력**

- 소득이 불안정하고 낮은 지불여력을 지닌 계층은 보험료를 감당하기 어려움

· **보험 문해력 (청구·재가입 장벽)**

- 청구 절차가 복잡해, 정보에 취약한 계층일수록 보상받지 못하고 포기함
- 연속 보장·재가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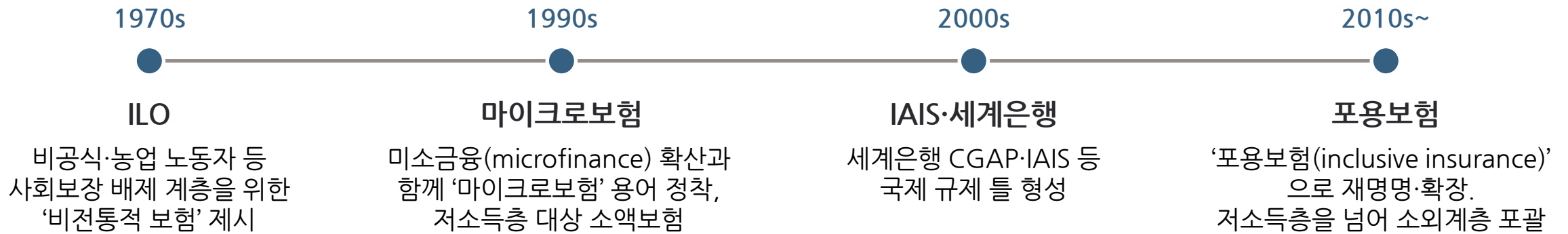


포용보험과 보험산업의 역할

1. 포용보험이란
2. 포용보험, 왜 보험산업의 과제인가

1. 포용보험이란

· 포용보험 개념의 전개: 마이크로보험에서 출발해 보험 소외계층 전반으로



· 포용보험이란, **보험 소외계층**이 필요한 **보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험

- 대상: 시장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저소득층·고령층·영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 위험: 취약계층이 시장에서 배제된 전통적 위험 + 기후·인구구조·노동 등 새로 부각된 신위험
- 공급 주체: 정부가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이 공급을 주도하는 협력 구조
- 핵심 요소: 접근성(accessibility)·이용가능성(availability)·부담가능성(affordability)·위험인식(awareness)을 갖춘

2. 포용보험, 왜 보험산업의 과제인가

- 포용보험은 **위험공동체를 유지·확대**하는 일이며, 이는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함과 동시에 **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으로 이어짐

공적 재정의 한계

- 새롭게 확대되는 위험과 사각지대에 재정·제도가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움
- 정부 대응은 사후 보전에 그쳐, 위험이 커질수록 지속하기 어려움

보험산업의 본질적 기능

- 위험을 사전에 분산하는 것은 보험의 본질 기능이며, 포용보험은 그 확장선에 있음
- 위험 평가·인수·분산 역량은 보험산업의 강점임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전략

- 취약계층을 위한 보장을 넓힘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높임
- 위험공동체를 유지·확대할수록 보험산업은 사회 내 역할과 기반이 넓어짐



보험업계의 실천과 포용보험 정책 현황

1. 취약계층을 위한 보험업계의 실천
2. 정부의 최근 포용보험 정책 현황



1. 취약계층을 위한 보험업계의 실천: ① 협회 차원의 활동

· 생·손보 업계는 **협회 공동기금**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공헌을 지속해옴

■ 생명보험협회 사회공헌위원회 · 2007년~

- **자살예방·생명존중** SOS생명의전화, 청소년자살예방, 마음건강지원
- **시니어·의료** 세대통합 일자리, 힐링센터, 희귀질환센터
- **교육·장학** 금융보험 교육, 학술연구 지원, 대학원·박사장학사업
- **취약계층 지원** 고립·은둔청년, 입양대기아동, 다문화가정 지원
- **공익확산** 노후준비 교육, 국민건강증진, 보험범죄 캠페인
- **기후·환경** 생물다양성 보존, 기후위기 교육

■ 손해보험협회 사회공헌협의회 · 2011년~

- **재해대응** 침수방지(예방)·희망하우스(복구)·풍수해·지진재해보험(제도)
- **저출생 극복** 난자동결 시술비,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
- **생활안전** 고령운전자 안전장치, 소방·경찰 유자녀 지원
- **기후 취약계층** 냉난방기 지원
- **금융교육** 1사1교 금융교육
- **기타** 긴급 재난구호기금, 동물등록제 활성화

1. 취약계층을 위한 보험업계의 실천: ② 개별 보험회사의 상품 · 활동

· 개별사는 이전부터 접근성 개선과 사회공헌으로 취약계층에 대응해 옴

- 기존 상품의 가입 문턱을 낮추는 상품과 제도 · 심사 개선을 통해 접근성을 향상시킴
- 임직원 봉사·교육멘토링·캠페인·직접 지원 등 사회공헌형 활동을 병행함

접근성 개선 상품

장애인 가입	전용상품 출시 → 차별금지 제도로 전환 사전고지 의무 폐지·심사 반영 금지로 가입 차별 완화 가입 시 차별경험 45.4% (2014) → 13.9% (2023)
고령·유병자	노후실손 가입연령 90세로 확대 (보장 연령 100세→110세로 확대) 유병자 보험 인수심사 체계 개편
시간제 보험	시간제 이륜차 보험 도입(2019) 가입대상 확대 및 할인등급 승계(2026 예정)
미니보험	소액단기보험으로 생활밀착형 보장 확산 (DIY형, 교통재해, 감염병, 상해)

사회공헌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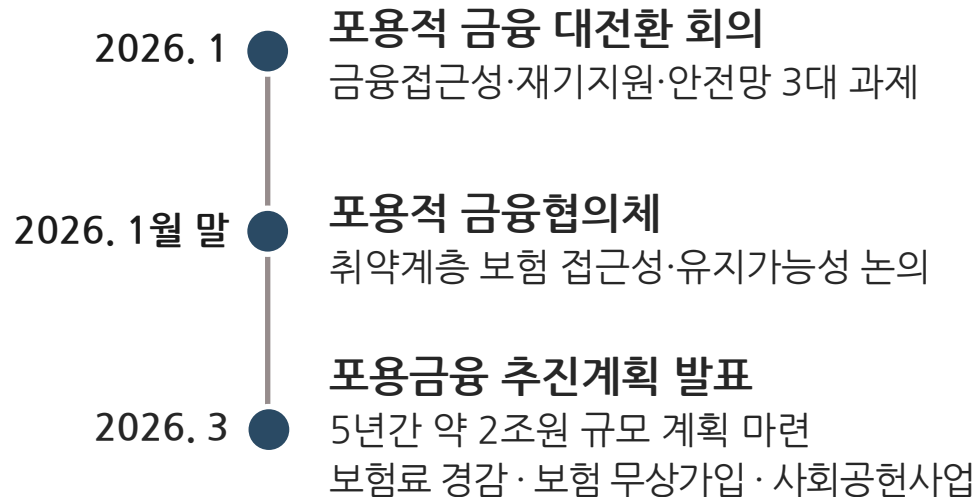
참여형 봉사	연탄·무료급식·반찬나눔·집짓기·헌혈·바자회 기부 등
교육·멘토링	청소년 금융교육·다문화 한글교육·장학금 지원
인식개선 캠페인	자살예방·교통안전·보이스피싱 예방
취약계층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이른둥이·백혈병·소아암 환아 치료비 독거 어르신·미혼모 가정 지원

2. 정부의 최근 포용보험 정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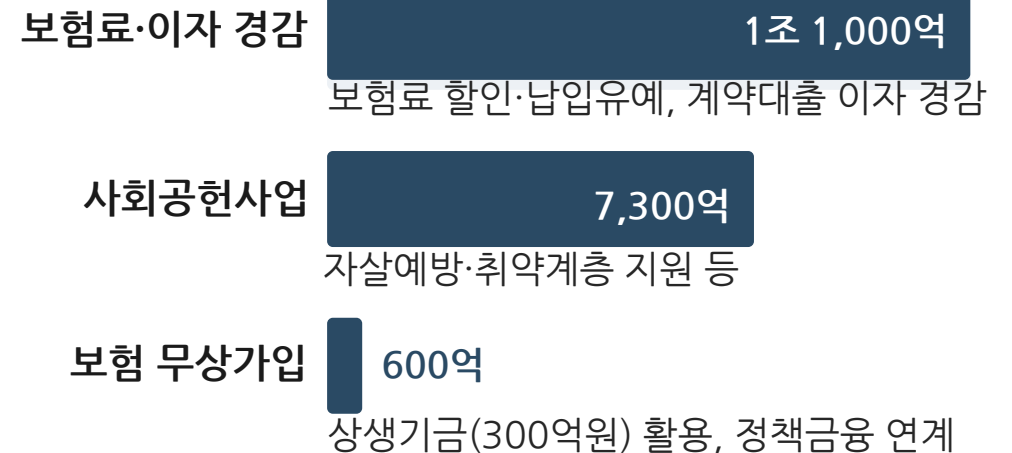
· 포용보험은 포용금융 정책의 한 축으로 다뤄져 왔고, 최근 그 지원이 확대되고 있음

- 2008년 미소금융중앙재단(현 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 지원시작
-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금융포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출범 및 ‘금융포용을 위한 9대 원칙’ 채택
- 2017년 G20 금융포용 액션플랜(FIAP)을 개정·채택하고, 2018년 국내 포용금융이 정책 논의 본격화
- 2025년~ 상생기금 조성 등 준비를 거쳐 보험업권 포용금융 추진 계획 구체화 및 지원 확대

최근 주요 포용금융·보험 정책 흐름



보험업권 포용금융 추진계획 (2026)



2. 정부의 최근 포용보험 정책 현황: 상생보험 · 보험료 경감

- 포용보험은 정부와 보험업권의 협력으로 추진됨
 - 재원은 보험업권이 부담하고 정부는 정책금융 연계와 지자체 매칭으로 뒷받침함
- 구체적으로는 **무상가입**을 지원하는 **상생보험**과 **보험료 경감** 방식이 있음
 - 상생보험은 2025년 8월 생·손보 업계가 각 150억씩 300억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마련하고, 전국 공모로 선정된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대상과 상품을 선택하도록 함
 - 보험료 경감은 운전경력 인정 할인·이륜차 시간제 보험·납입 유예 등으로 이루어짐

상생보험 (소상공인 지원 5종 + 저출산 극복 1종)

신용보험	소상공인 사망·장해 시 대출금 상환
상해보험	5인 미만 소상공인·중소기업 단체 상해
기후보험	폭염·호우로 인한 소상공인·일용직 소득 보전
풍수해보험	태풍·홍수로 인한 상가 파손·침수 피해
화재보험	전통시장·골목상권 화재 피해액 보상
다자녀 안심보험	다태아·다자녀 상해·중증질환 보장

보험료 경감

운전경력 인정제도	운전경력 등 반영해 자동차 보험료 할인
이륜차 시간제 보험	배달종사자 운행시간만큼 보험료 산정
대리운전자 보험	사고경력자 할증 체계 개선을 통한 적정 보험료로 가입 가능
납입유예·중지제도	경제적 어려움 시 보험료 납입유예·중지에도 가입유지 지원
저출산	출산·육아휴직 시 어린이 보험 할인

IV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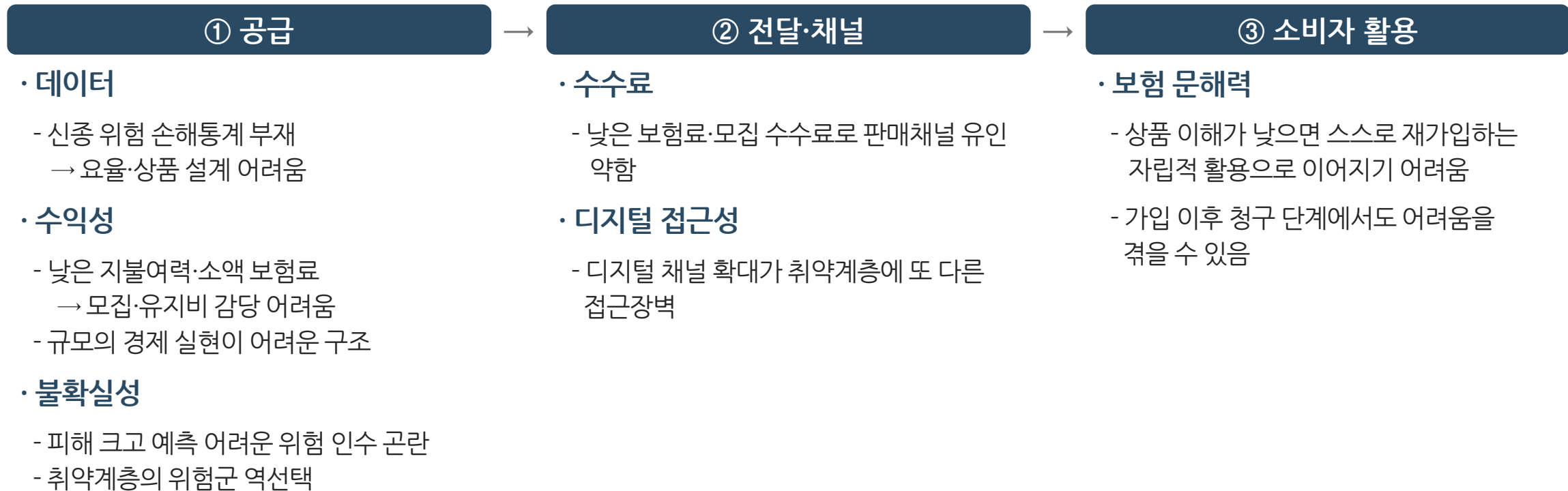
1. 현행 접근의 한계
2. 시장 자생을 위한 유인·여건의 부재
3. 향후 방향

1. 현행 접근의 한계

- 협회와 개별 보험회사의 **사회공헌**은 본업인 보험과 분리된 **봉사·기부형** 활동에 가까움
 - 본업의 상품 개발이나 인수 역량으로 전환되지 않아 일회성에 그치고, 지속적 보장으로 이어지기 어려움
 - 손익과 무관한 비용으로 집행되어 경영 여건에 따라 규모가 좌우됨
- 상품형 노력도 이어졌으나, **보장범위가 좁고 소액·단기 중심**임
 - 미니보험·지수형 보험 등은 소액·단기에 집중되어, 기후·재난이나 고령 돌봄 같은 고위험·장기 영역은 상품화가 더딤
 - 유병자·장애인 상품은 가입 문턱은 낮아졌으나 실질 보장이 제한 되는 경우가 많음
- 정부 정책도 무상가입 · 보험료 경감 등 재원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에 집중되어 있음
 - 가입자의 부담은 덜어주지만, 공급자의 상품 개발·위험 인수 역량으로 전환되지 않음
 - 재원 투입 중심이라, 지원이 멈추면 보장도 함께 멈출 수 있음
 - 상생보험도 공동기금 기반의 무상지원이라는 점에서 같은 한계(직접 지원)를 지님

2. 시장 자생을 위한 유인·여건의 부재

- 직접 지원 중심의 접근으로는 공급 → 전달 → 활용 **각 단계의 장벽**이 그대로 남아, **스스로 유지되는 시장 생태계**로 이어지기 어려움



3. 향후 방향

- 포용보험이 지속되려면 지원에 기대지 않는 **자생적 시장생태계**로 나아가야 함
 - 현재는 공동기금·보험료 지원·무상가입 등 직접 재정지원 중심이라, 지원이 종료되면 보장도 종료되는 구조임
 - 데이터, 위험 분담, 수익성, 전달체계를 갖춘 자생적 시장이 필요함
- 초위험 사회의 위험은 한 주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포용보험은 **민관협력 모델**로 작동해야 함
 - 정부는 제도와 인프라를, 보험회사는 위험관리와 상품·서비스를, 지역사회와 다양한 서비스 제공기관은 현장 전달을 맡는 협력체계가 필요함
 - 포용보험은 공공과 민간을 대체가 아니라 연결하는 장치임
- **한국형 포용보험의 과제**는 위험공동체 유지를 통해 **사회적 가치**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선순환**시키는 것임
 - 위험공동체를 지킬수록 사회의 안전망이 넓어지고, 산업이 설 자리도 넓어짐

감사합니다.

References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4. 8. 5.), “플랫폼종사자 88.3만명으로 전년 대비 11.1% 증가”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 7. 2.), “폭염에 취약한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폭염 상황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2072, 2026.07.13,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 / 전국
- 국가데이터처(인구총조사과), 2024, 2026.07.13, 1인가구비율(시도/시/군/구)
- 국회예산정책처(2026), “포용적 금융 등 금융개혁 방안 Ⅲ 『은행·보험 부문의 포용적 금융서비스 접근성 강화 방안』”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5. 12. 15.), “이륜자보험 요율체계 합리화 '를 통해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 1. 9.),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시작합니다.”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 1. 29.), “보험료 부담 등으로 보험 가입이 힘들었던 저소득층, 저신용자도 꼭 필요한 보험 가입을 확대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 3. 16.), “질병·사고·날씨 등 생활위험 보장보험에 무상으로 가입하는 「상생보험 사업」을 보험업권이 6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합니다.”
- 김규동(2026), 「포용적 보험 추진 현황과 제언」, 보험연구원 KIRI Focus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2026), “2025 연차보고서 생명에 사랑을 더하다”

References

- 손해보험협회 (2026), “2025 손해보험 사회공헌 활동사례집”
- 이은영·강윤지(2024), 「국내 발달장애인 현황과 민영보험의 역할」,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 McLennan, M. (2023). “The global risks report 2023 18th edition”. In *World Economic Forum Cologny*.
- Swiss Re Institute(2024), “Natural catastrophes in 2023: a looming norm?”, sigma research, No. 1/2024

KIRI 세미나

글로벌 혁신사례와 한국형 포용보험 생태계 구축방안

손성동 · 이은영(RMI보험경영연구소)

2026.7.23.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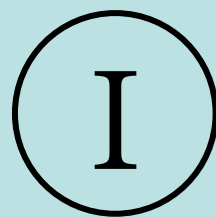
I. 연구배경 및 목적

II. 글로벌 포용보험 혁신사례 분석

III. 국내 포용금융·보험 동향 및 한계

IV. 한국형 포용보험 생태계 구축방안

V. 맺음말



연구배경 및 목적

“초위험사회의 도래에 따른 보장공백과 한국형 포용보험 생태계 구축의 당위성”

1. 초위험사회의 도래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초위험사회와 다중위기

- 기후위기, 초고령화, 각 경제 확산 등 이질적 위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는 **다중위기의 일상화**
- 전통적인 통계적 예측을 벗어난 **비선형적/비연속적 불확실성** 전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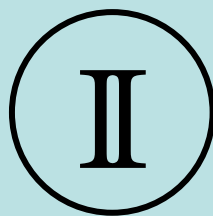
기존 안전망의 한계

- 보험가입률 포화(90%↑)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가입률은 50%대 미만**에서 정체되는 사각지대 발생
- 엄격한 U/W 기준과 사후적 금전보상에 치중하는 전통적 상업보험 모델로는 **취약계층 복합 충격 방어 불가능**

한국형 모델의 지향점

- 단 한 번의 사고가 가계붕괴 및 빈곤함정으로 직결되는 것을 차단하는 **능동적 리스크관리 체계** 요구
-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와 한국 고유의 정(情) 문화 기반 대면케어 결합 K-포용보험 모델** 정립

기존 대출 중심 서민금융의 한계를 보완하고,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경제적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보호하는 **새로운 사회안전망**을 모색함



글로벌 포용보험 혁신사례 분석

“데이터 효율성(High-Tech)과 인적 신뢰자산(High-Touch)의 융합을 통한
개도국과 선진국의 보장격차 극복방법 조망”

1. 분석 프레임워크(Analysis Framework)

● 분석 목적 : 사회적 회복탄력성 기반의 리스크 대응 패러다임 고찰

국가별 경제적·사회적 성숙도에 따른 리스크 대응 패러다임을 분류하고, 인프라 환경과 보험의 본질적 가치인 사회적 회복탄력성이 상호작용하는 메커니즘을 규명

[개도국형 : 생존형 혁신모델]

- 제도적·물리적 인프라 공백을 디지털 기술과 에이전트 네트워크(Human)로 즉각 메우는 도약 전략
-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방어막 구축에 집중

[선진국형 : 적응형 혁신모델]

- 성숙한 금융시장 내 초고령화, 디지털 소외 등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데이터 기반 예방과 인적 돌봄을 결합하는 지능형 서비스 통합 지향

● 4대 다차원 분석 지표

① 상품구조

② 디지털 활용도

③ 휴먼 인터페이스

④ 거버넌스 및 정책

● 방법론 : 신뢰자산(Trust Asset)

- 정보비대칭이 심각한 포용보험 시장에서 현장 인적 네트워크가 축적한 관계적 신뢰가 기술 수용성과 비즈니스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엔진

2. 글로벌 지형도 및 주요 동향

동남아/중남미(개도국형)

- **상품 혁신** : 대출/소득보장 위주에서 소액 건강/재해/농업보험으로 포트폴리오 다변화
- **접점 혁신** : 통신사/송금앱/이커머스 등 로컬 디지털 플랫폼 기반 내장형 가입 프로세스 구축

영국/일본 등(선진국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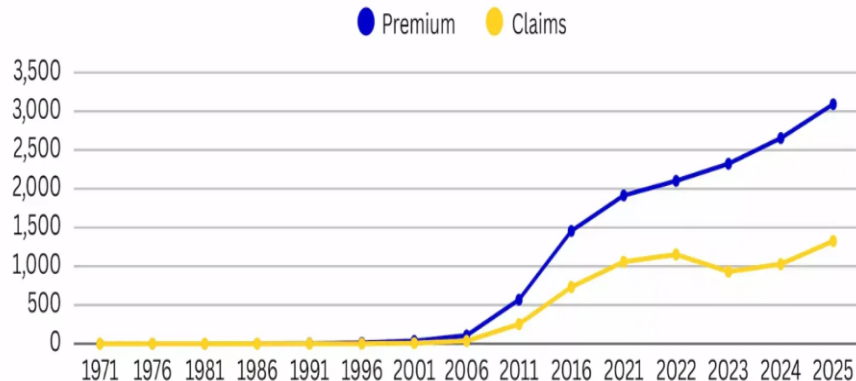
- **고객 혁신** : 고령층, 저소득 고립가구, 신용불량자 등 고위험군 대상 맞춤형 상품 및 커뮤니케이션
- **서비스 통합** :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해 AI기술과 현장 커뮤니티 케어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서비스 모델

한국(정책 연계)

- **거버넌스** : 서민금융, 재난안전, 사회적 돌봄 등 정부의 정책자금과 연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 **신뢰자산** :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인프라, 주민자치회 등 현장 밀착형 조직을 활용한 신뢰확보/지속가능성 제고

3. 필리핀 포용보험 혁신 : 인적 신뢰자산과 테크의 다각적 결합

“디지털 공백을 메우는 관계적 신뢰의 힘”



오프라인 허브 : 전당포(세부아나 킬리에)망 활용

- 금융 인프라 전무 농어촌 서민의 보험판매 최전선으로 탈바꿈
- 취약계층 생활 밀착형 리스크 보장 ‘알라강 세부아나 플러스’ 시리즈로 수백만 명의 가입자 유치

모바일 혁신 : Gcash 기반 Ginsure 임베디드 생태계

- 1위 핀테크 플랫폼 내 보험가입 모듈 내장 3번 탭으로 전자지갑 결제 可
- 보험금 36개월 분할 지급 설계 → 유가족의 재무관리 실패 방지

기술/기후 혁신 : CLIMBS 파라메트릭 보험

- 위성데이터 기반 기후 임계치 초과시 사전 약정된 보험금 자동 지급
- 대형재난시 고속 자금 방출 → 농민의 빈곤함정 추락을 막고, 협동조합 대출 포트폴리오의 재무건전성 동시 보호

4. 인도 포용보험 혁신 : 디지털 공공 인프라와 피지털(Phygital) 융합

인프라 혁명 : 비마 수감(Bima Sugam)과 인도 스택

- 생체인식(Aadhaar), 디지털 결제(UPI) 등 국가 차원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 적극 연계
- 수수료 제로 공공 플랫폼을 통해 영구적 보험 ID인 '비마 폐찬' 발급 → 완전 무서류 및 보상 프로세스 중앙화로 불신 제거

ラスト마일 혁신 : BC 네트워크와 여성 비마 바학

- 전국 150만 개 BC(비즈니스 특파원) 아울렛과 마을 단위 최일선 여성 요원(비마 바학)의 밀착형 인적 신뢰자산 활용
- 다모(Damoh) 지역 실증연구 : 뱀주사위놀이 보드게임 등 행동과학 톨박스 활용 대면 설득 → 소액 생명보험 가입률 36%↑

상품/규범 혁신 : 비마 비스타르 및 소수자 포용

- 비마 비스타르(Bima Vistaar) : 생명/건강/상해/재산을 연 1,500루피로 묶은 초간소화 패키지 및 기상 데이터 연동 자동 파라메트릭 손해사정 도입
- 마스터 서큘러 2024 : 소수자(정신질환, 장애인, 트랜스젠더, HIV 환자 등) 차별 철폐 및 제도권 보호망 편입 강제

공공 디지털 플랫폼(High-Tech)과 라스트마일 인적 신뢰망(High-Touch)의 결합을 통해 수억 명을 아우르는
전세계 최대 규모의 포용금융 청사진 제시

5. 영국 포용보험 혁신 : 빈곤 프리미엄 해소와 소비자의무 도입

구조적 모순 : 빈곤 프리미엄의 해악

- 영국 가계의 65%가 보장성보험이 없고, 성인 3분의 1이 재무적 회복탄력성 결여 상태
- 알고리즘 가격차별 : 동일 조건 운전자라도 가난한 동네 우편번호를 가졌다는 이유로 156~314 파운드의 추가 보험료 부담
- 지불방식의 역진성 : 일시납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이 월납 선택시 신용위험 명목으로 최대 41%의 징벌적 이자 및 패널티 부과

규제 패러다임 혁명 : FCA 소비자의무 프레임워크

- 사후적 규제 → 실질적 소비자결과(Consumer Outcomes) 중심 규제
- 상품 디자인 단계부터 접근성과 공정가치 원칙을 내재화하도록 강제
- 제3자 전문기관을 통해 재무적 고통, 디지털 배제 상황을 시뮬레이션해 취약고객 감사(Vulnerability Test) 상시 가동

시장 및 시스템 개혁 : 민관 합작 파일럿과 제도적 난제

- Fair4All Finance 캠페인 : 보장 사각지대인 사회적 임대주택 세입자를 위해 임대차계약시 가재도구 보험 옵트아웃 내장형 모델 실험
- 제도적 충돌 : 민간 소득보상보험금 수령시 국가보조금 1:1로 삭감하는 규정 오류 및 과도한 보험프리미엄세가 포용보험 확산 저해

정밀한 데이터 알고리즘이 초래한 빈곤 프리미엄을 제거하기 위해 소비자의무와 행동경제학적 넛지를 동시에 가동한 **선진국형 개입 모델의 전형 제시**

6. 일본 포용보험 혁신 : 소액단기보험제도와 사회적 리스크 특화 상품

제도적 기반 : 소액단기보험과 비례규제

- 무인가 공제 양성화 : 2005년 음성적 공제 단체를 소액단기보험 라이선스로 제도권 편입(비례규제 원칙)
- 진입장벽 완화 및 한계 설정 : 최저 자본금 1000만엔, 보험기간 1~2년의 순수보장성, 1인당 총 보장한도 1,000만엔 제한
- 양적/전략적 성장 : 2024년 보유계약 1,248만건 돌파, 대형 보험사 및 이종산업 자본의 신상품 기획 테스트베드로 활용

시장 혁신 : 인구/사회적 리스크 특화 상품

- 고독사 보험 : 집주인(계약자)에게 고독사 발생시 특수 청소비 및 공실 임대료 손실 보장 → 독거노인 주거장벽 완화
- 인지증(치매) 및 소수자 보장 : 치매진단 일시금 + 돌발행동 배상책임 보상, 젠치의 안심보험(중증 지적장애인 전용보험)
- 임베디드 리스크 대응 : 스마트폰 파손, 날씨보험(지수형), 티켓 취소 등 MZ세대 일상 리스크를 B2B2C 방식으로 결합

건전성 과제와 피지털의 미래

- 꼬리위험의 한계 :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저스트인케이스의 보험금 삭감 지급, 펫베스트 파산 등
- 블록체인/코인 결합 비전 : 엔화 스테이블코인 및 Open API 연동을 통해 초소액/초단기 스마트계약 생태계 추진

초고령화의 고독사·치매 등 위험을 정교한 비례규제로 흡수하되, 소자본의 꼬리위험 과제를 안고 있으며, 향후 초소액 블록체인 결합을 통해 마진 혁명을 지향하는 적응형 모델

7. 종합 : 비교분석 및 시사점

[경제발전 단계별 포용보험 모델 비교]

구분	개도국형 (생존형 모델)	선진국형 (적응형 모델)
핵심과제	금융소외 및 인프라 공백 해소	복합위기 대응 및 보장격차 해소
휴먼 기능	오프라인 창구를 대체하는 인프라	정서적 단절 및 맥락 관리 (서비스 고도화)
디지털 역할	결제/가입 편의성 중심(Low-Tech)	데이터 기반 리스크 예방/진단(High-Tech)

[시사점]

- ① 사후 보상에서 '사전 예방 및 실물 돌봄'으로 패러다임 전환
 - 인슈어테크 기반 리스크 예방과 일상 회복을 돕는 능동적 안전망 구축 필요
- ② 디지털 효율성과 신뢰 기반 상담의 '하이브리드(피지털)' 전략
 - 플랫폼으로 비용을 낮추되, 현장 인적 자원을 에이전트로 전환하여 정보 취약계층의 신뢰 확보
- ③ 민관 데이터 공유 및 거버넌스 혁신
 - 정부의 복지데이터와 민간의 인슈어테크 역량을 결합할 수 있는 유연한 규제 샌드박스 인프라 시급

글로벌 혁신 모델의 핵심은 **디지털 효율성(High-Tech)**과 **인적 신뢰(High-Touch)**의 **하이브리드 결합**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한 포용보험 정책 수립/추진 필요



국내 포용금융 · 보험 동향 및 한계

“새로운 사회계약의 전제조건 : 보장공백의 정밀 진단”

- 단일 위험을 넘어 복합 취약성으로 진화하는 국내 소외계층의 리스크 실태와 기존 안전망의 한계 -

1. 한국 포용금융·보험의 역사(4단계 연대기)

	1단계 1997~2004년 생존형 안전망 구축기 IMF 위기 극복과 기초 안전망 마련	2단계 2005~2012년 근로빈곤층·서민금융 확대기 위기 대응에서 생활 안정으로 확장	3단계 2013~2019년 포용·맞춤형 복지·금융 제도화기 취약계층 세분화와 제도 통합	4단계 2020~현재 초위험사회 대응기 복합위험·디지털·재난 대응으로 진화
주요 재난·재해·사고 	1997 IMF 외환위기 2002 신용카드 대란 2003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2003 태풍 '매미' 	2007 태안 유류유출 사고 2008 이천 냉동창고 화재 2010 천안함 피격 사건 2011 동일본 대지진(해외) 	2014 세월호 참사 2015 메르스(MERS) 확산 2016 경주 지진 2017 포항 지진 	2020 코로나19 팬데믹 2022 이태원 압사 참사 2022~23 집중호우·태풍 (힌남노 등) 2023 오송 지하철도 침수 사고 
주요 사회복지제도 변화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생활보호법 → 권리성 복지 전환) 2003 자활근로사업 확대 	2006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 (위기상황 선지원) 2007 차상위계층 지원 확대 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2015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개편 (급여별 분리·강화) 2017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2018 아동수당 도입 	2020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 2021~ 통합돌봄·지역사회 돌봄 강화 2023 고독사 예방·지원 강화 
주요 사회보장제도 (핵심 제도 보완) 	- 기초 소득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의료급여: 저소득층 의료보장 - 장애인 복지제도: 장애인연금·수당, 활동지원 등 기초지원 체계 마련	- 기초 소득급여: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장애인 복지제도: 장애인연금 인상 및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 기초 소득급여: 맞춤형 급여체계 정착 -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선택병의원·약제비) - 장애인 복지제도: 장애등급제 폐지(19),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기초 소득급여: 출생한 위기가구 발굴·지급 - 의료급여: 비대면 진료·재난의료지원 확대 - 장애인 복지제도: 서비스 접근성 강화, 디지털 지원 확대 
포용금융 변화 (정책/제도) 	1998 신용회복위원회 설립 2002 배드뱅크(한마음금융) 가동 2003 '희망모아' 등 채무조정 (신용불량자 구제) 	2005 미소금융 시작 2006~ 서민금융상품 대출 출시 (햇살론 등) 2010 사회망쉴씨 대출 	2013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2014 국민행복기금 출범 2016 중금리대출·사잇돌 대출 확대 2017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2020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 2021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금융지원 2022 디지털 포용금융(비대면 서비스 확대) 2023 취약차주 지원 강화 
포용보험 변화 (공공/포용 보험) 시대별 주요 포용보험 출시 연표	1단계 (1997~2004) 2000  장애인전용보험 출시 장애 특성 반영 맞춤형 보장 상품 시작 2003  만원의 행복 보험 취약계층 대상 저렴한 보험 보장 시작	2단계 (2005~2012) 2005  미소금융보험 서민 맞춤형 저축·대출 연계 보험 출시 2006  미니보험 활성화 소액·단기 보험 전문업 제도로 확대 2010  풍수해보험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 공적 보험 도입	3단계 (2013~2019) 2014  장애인전용연금 출시 장애인의 안정적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 제도 도입 2015  시민안전보험 출시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등으로 일상 속 위험 보장 확대 2017  기후보험 기후위기 리스크 대응 보험 상품 출시 2018  라이더보험 배달·이동노동자 전용 보험 상품 출시	4단계 (2020~현재) 2020  유병자 간편심사보험 유병자도 가입 가능한 간편심사 보험 확대 2021~  미니보험 활성화 (지속 확대) 생활밀착형 소액보험 다양화·확대

2. 국내 취약인구 현황 및 다차원적 복합취약성 지형도

• 금융이해력 및 회복력 결여(①, ③)

- 성인 금융이해력 평균 62점(60대 이상 40%가 취약계층에 집중)
- 국내 가구 35~40%(취약가구 300만명), 기습적인 100만원 지출 대응 불가

• 디지털 소외 및 돌봄 고립(②, 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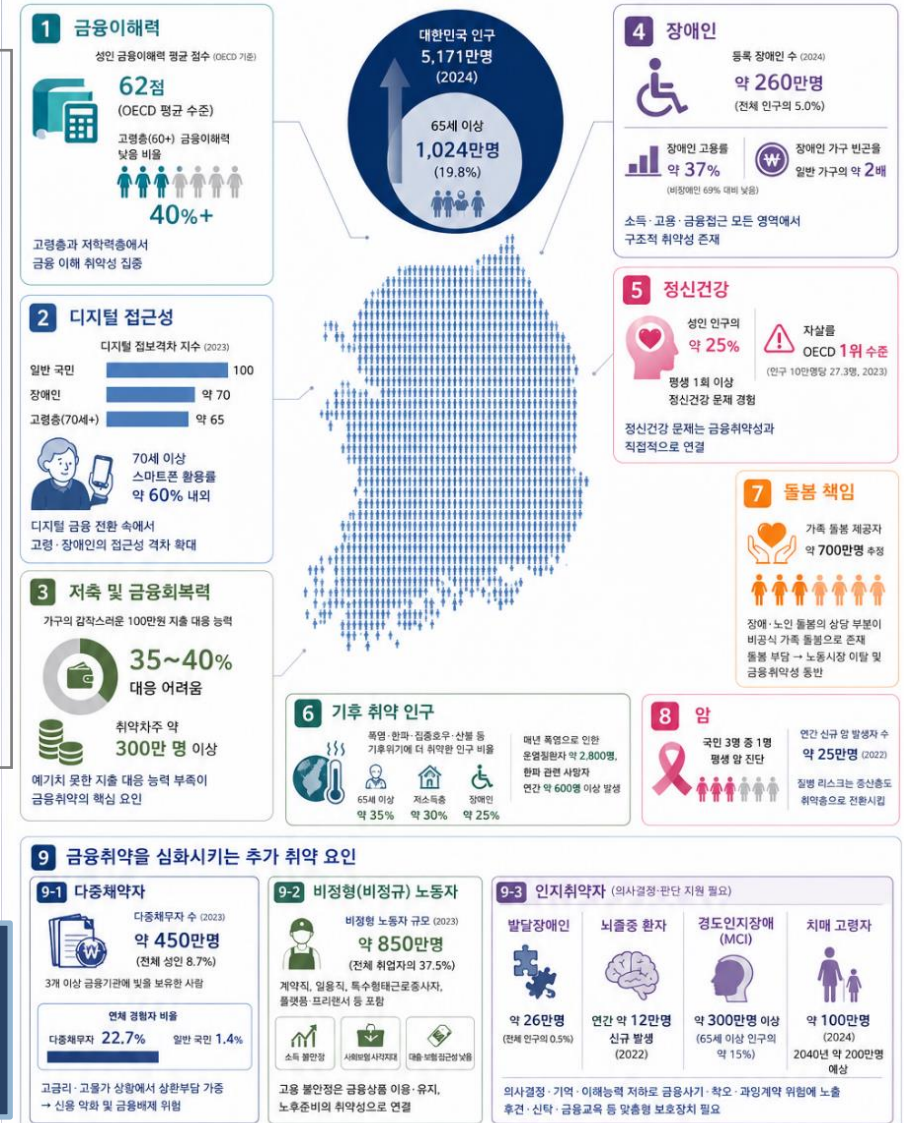
- 70대 이상 스마트폰 활용률 60% 내외 수준에서 정체
- 가족 돌봄 제공자 약 700만명 추정(돌봄 부담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 동반)

• 취약성을 심화시키는 추가 요인(⑨)

- 다중채무자(450만명)의 상환 압박 및 비정형 노동자(850만명)의 고용불안
- 기후위기 지표(⑥) 및 인지취약성과 중첩되어 다차원적 복합취약성 형성

복합취약성이 초래한 보장격차

-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취약층 민영보험 가입률 **52.1%**(보장 역진성)
- 의료비 지출이 가장 높은 70대 이상 건강보험 가입률 **28.7%**로 급감



3. 민간주도 장애인 전용보험의 도태와 시사점

• 전용상품 도태의 표면적 원인

- 공급측의 수익성 저조(사업비 미책정), 수요측의 지식/정보 부족 악순환
- 일반상품보다 저렴함에도 홍보부족, 설계사 추천 기피로 사실상 도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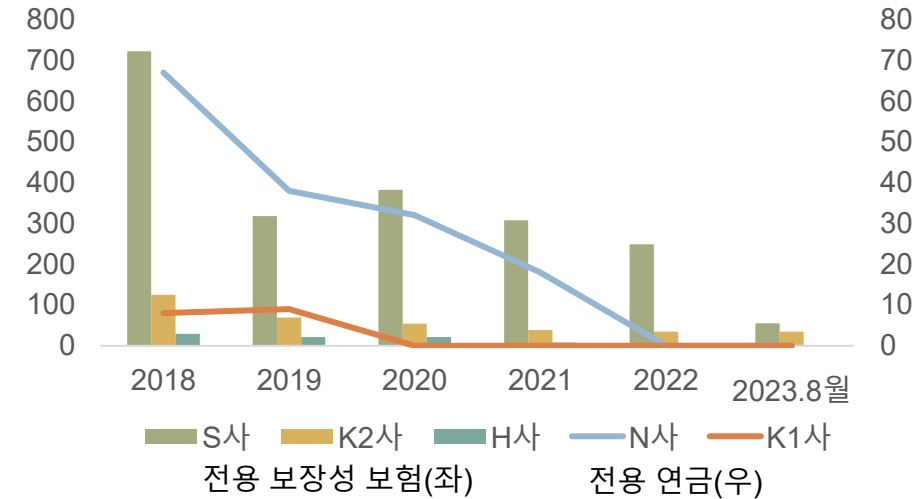
• 전용상품 도태의 이면적 원인(형식적 평등의 한계, 정교한 금융소외)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외형적인 가입거절은 감소
- 정밀심사 명목의 높은 할증요율, 특정부위 부담보 부과 등 실질적 배제 지속

시사점

-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결여된 **민간단독 공급방식의 구조적 한계** 노출
- 신뢰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밀착 지원할 **전달체계 내 중간자(Mediator) 역할 미흡시 실패 가능성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및 연금보험 가입 건수 추이



<신계약건수>



4. 국내 포용보험 생태계의 3대 구조적 문제점

① 협소한 인식과 자금유통 중심의 편식

- 포용보험 고유의 위험관리 기능보다 단순 ‘금융취약자 지원 수단(시혜적 서민금융)’으로 보는 협소한 관점 고착
- 최근의 상생금융 대책조차 자금유통 목적의 신용생명보험 공급에 편중되어 취약계층 맞춤형 상품 다변화 지연

② 제도적 컨트롤타워 부재와 리스크 파편화

- 휴면보험금 관리 및 포용금융 창구의 분산으로 인한 데이터 집적 및 자원조달의 구조적 한계
- 보험 고유의 위험관리 기능보다 일방적 수혜 수단으로 접근하여 금융당국과 복지부처/지자체간 실물 복지 인프라의 유기적 연계 및 결합 시너지 미흡

③ 단기 아젠다 편중 및 데이터 인프라 결여

- 사건/사고 발생시 즉각 대응하는 보급률/가입률 중심의 단기 성과평가에 매몰
- 실질적/경제적 회복탄력성을 검토할 성과체계가 미비하며, 공공 데이터 연계 제한으로 기초 요율 데이터 부족 (“포용보험 = 비용” 관점 고착)

부처간 **칸막이 규제**와 가입률 중심의 **단기 성과주의**가 결합하여 ‘**포용보험 = 비용**’이라는 업계의 인식을 고착화시키고, **취약계층의 실질적·경제적 회복탄력성 제고**를 저해

Ⅳ

한국형 포용보험 생태계 구축 방안

“디지털 플랫폼(High-Tech)과 밀착형 케어 네트워크(High-Touch)의
선택적 결합 및 투트랙 규제완화를 통한 한국형 자생적 선순환 생태계 구현”

1. 한국형 포용보험 모델 설계(안) : 도입 당위성과 전략

<도입 당위성 : 한국사회의 4대 역설>

① 초고령화와 정책시차

- 초고령사회 진입 소요기간 단 6년(일본은 10년)

② 보장격차의 역설

- 보험침투율 11.8% vs 실손보험 무보장률 58.4%

③ 디지털 소외

- 세계 최고 수준 인프라 이면의 고령층 금융/기술 배제

④ 기후 불평등

- 만성 기후리스크가 취약계층의 생존리스크로 직결

<핵심전략 : 정책 모듈화와 선택적 재구성>

① 메커니즘 모듈화(Modularization)

- 해외 성공사례의 핵심 운영 메커니즘 단위 분해

② 상황적 재구성(Reconfiguration)

- 국내 사회경제 맥락과 인프라 수준 맞춤형 선별 조합

③ 다차원 하이브리드(Hybridization)

- 개도국 : 디지털 플랫폼 및 유통망 혁신(Tech) 차용
- 선진국 : 제도적 공정성(규제)과 밀착형 돌봄망(Touch) 차용

해외 모델의 일괄 도입을 지양하고, **개도국의 '디지털 혁신'**과 **선진국의 '제도적 보호·돌봄망'**을
선택적으로 재구성한 **한국형 하이브리드 모델** 지향

2. 활성화 방안 : 공공/민간 듀얼 트랙 피지털(Phygital) 생태계

High-Touch : 공공 복지망 & 설계사 듀얼 채널 융합

• 공공 트랙 연계

- 전국 우체국 금융망 및 사회복지사 등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인력 밀착 연계

• 민간 설계사망 활용

- 대형 보험사 및 GA 설계사 조직 → ‘사회적 리스크 코디네이터(Connector)’로 활용

• 캐시리스 케어(Cashless Care)

- 사후 지급형 대신 현장에서 돌봄/의료 서비스를 현물로 즉시 제공하는 전달체계 구축

High-Tech : 청년/프리랜서를 위한 플랫폼 임베디드화

• 플랫폼 모듈 탑재

- 빅테크(Toss 등), 배달/각이코노미 플랫폼內 초소액보험 내장

• 업셀링 파이프라인

- 가입 마찰 제로화로 최초 접점 형성 → 업셀링 기반 확보

도덕적 해이 통제 : 불완전판매 방지 세이프가드

• 인적 불완전판매 제어

- 디지털 녹취 표준화 및 필수 체크리스트 준수 의무화

• 글로벌 벤치마킹

- FCA 소비자의무 규제, 인도 BC 요원 행동과학 툴박스 접목

하이테크(플랫폼)로 가입비용을 낮춰 **청년층**을 흡수하고,
하이터치(설계사·공공망)로 **고령층**을 돌보는 보완적 안전망 구축

3. 제도적 기반 : 공급 다원화를 위한 투트랙 규제 유연화

<Track ① : 기존 보험사>

- 포용보험 지정/인증제 도입
 - 기준(취약계층 타깃, 초소액 요율, 약관 단순성 등)을 통과한 상품을 포용보험으로 지정/승인
- 인센티브
 - K-ICS 위험계수 우대, 상생금융 평가 가점, 서민금융 출연금 요율 감경,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가점 등

<Track ② : 소액단기보험사>

- 자본금 완화 및 IFRS17 평가 예외 적용
 - 일본(보험사 10억엔, 소액단기 1000만엔) 수준으로 완화
 - 시가평가 의무 유예 및 미경과보험료 기준 책임준비금 간이 적립방식 허용 등
- 간이 지급여력제도 도입
 - 보험인수위험 및 자산운용위험 중심 단순화된 공식 적용

기존 보험사에는 'K-ICS 완화 + 출연금 감면 + 상생금융 가점 등'의 패키지 혜택을,
소액단기보험사에는 '일본식 간이규제'를 적용하는 투트랙 유인구조 구축

4.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 : ‘포용보험재단’ 설립 당위성

<기존 공공기관 활용의 한계>

• 기능적 부적합(Mismatch)

- 서금원의 정체성은 ‘신용공급 및 채무조정’에 특화
- 계리적 리스크 분석, 재보험 풀링 등 위험관리 전문성

• 경영의 경직성(Rigidity)

- 준정부기관 규제 및 기재부 경영평가 예측
- 데이터 API 결합, 플랫폼 임베디드 제휴 등 민첩한 비즈니스 혁신 곤란

• 하향식 동원방식

- 보험사의 자발적 인프라 제공 및 유도에 한계

<재단법인 설립의 당위성 및 기대효과>

① 자발적 민관 협력(PPP) 구도

- 정부, 업계 등이 지분으로 참여하는 민법상 비영리재단 설계
- 민간 보험사를 주도적 비즈니스 파트너로 격상

② 보험/위험관리 전문성 확보

- 재보험기금 수탁, 리스크 풀 설계, 표준 포용보험 규격화 등

③ 경영 기동성(Agility) 및 혁신 주도

- 공공기관법 등 엄격한 법정 규제 예외화
- 핀테크 연계, 인슈어테크 샌드박스 등 파괴적 혁신 신속 추진 가능

단순 대출·지원 공적 기구를 넘어 민관 협력(PPP)과 보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필요

5. 컨트롤타워 : ‘포용보험재단’의 역할 및 작동 메커니즘

<재단의 4대 핵심역할>

① 리스크 & 자본 풀링(Risk Pooling)

- 국가재보험기금 수탁관리를 통한 소액전업사의 거대위험(Tail Risk) 분산

② 공동 IT 플랫폼 제공

- 소액전문사용 클라우드 기반 공동 IFRS17/K-ICS 전산 인프라 제공 → 설립 초기 인프라 장벽 제거

③ 데이터 가교(Data Gateway)

- 정부 복지망 데이터와 민간 보험사 API를 실시간 연동/결합해 사각지대 정밀 식별

④ 표준 포용보험 규격화

- 가입/청구 프로세스 전면 간소화, 초저가형 표준 포용패키지 가이드라인 설계(Bima Vistaar 방식)

<국가재보험 작동 메커니즘>

• 보험업법 제한 우회

- 민법상 재단은 재보험업 영위 불가 → 특별법(포용금융법)에서 포용보험 국가재보험기금 설치

• 재단의 수탁관리

- 재보험료 수납, 재보험금 지급, 여유자금 운용 등 대행

• (선례) 농어업재해재보험

- 국가재보험 사무를 재단법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

재단의 **4대 핵심역할(풀링·공동IT·데이터가교·규격화)**을 실천하기 위해
농금융 모델 기반 **국가재보험 수탁관리** 메커니즘을 유기적으로 결합

6. 한국형 포용보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

1단계(기반 조성기) : 도입 및 법제화 기반 마련(1~2년차)

- 포용금융지원법(가칭) 제정 : 포용재보험기금 설치 및 포용보험재단 위탁 근거 마련
- 포용보험 지정/인증 기준 수립 : 대상 취약계층 범위, 초소액 요율 가이드라인, 약관 단순화 표준 지침 고시 등
- 재단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 민/관/학 공동 참여단 발족 및 1차 시범상품(예: 기후 취약계층 파라메트릭 보험) 출시

2단계(성장/확장기) : 플랫폼 가동 및 인센티브 본격화(3~4년차)

- 비영리 포용보험재단 공식 출범 : 국가재보험기금 및 행정사무 업무 수탁 대행
- 공동IT 및 데이터 인프라 가동 : 소액전문사용 클라우드 결산 전산망 대여 및 정부 복지망 데이터 가교 API 연동 개시
- 기존 보험사 유인책 본격 적용 : K-ICS 위험계수 할인, 서민금융 출연금 요율 감경, 행정조치 가점 등

3단계(자생적 정착기) : 제도화 완료 및 자생력 확보(5년차 이후)

- 소액전문사 간이규제 안착 : 일본식 간이 지급여력제도, IFRS17 시가평가 예외 규정 감독규정 반영 완료
- 민간 주도 자발적 선순환 달성 : 단순 시혜성을 탈피하여 상생금융 평가와 연계된 민간 자율 비즈니스 모델 확립
- 사회적 회복탄력성 완성 : 기술(Tech)과 휴먼 코디네이터(Touch)의 유기적 결합으로 취약계층 보장 공백 근원적 해소

‘입법 및 기준 수립’에서 ‘공동 인프라 가동’을 거쳐, 최종적으로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간이규제’가 맞물리는
한국형 포용보험 선순환 생태계 완성



매음말
갓음말

새로운 사회계약 - 그물망에서 트램펄린으로

안전망(Safety Net)을 넘어 트램펄린(Trampoline)으로!

[기존의 시혜적 안전망]

- 추락을 막지만 그물에 머물게 함 (소극적 보호)



Passive Protection,
Remaining in the Net.

[우리가 지향하는 포용보험 트램펄린]

- 추락을 막고 다시 일상으로 튀어 오르게 함 (적극적 재도약, 회복탄력성)



Active Re-jump,
Bounce Back to Life.



1. 국가 재정 파탄 방지 (Policy Lag 최소화)

취약계층 보장 공백 해소로 미래 국가 재정 부담 사전 차단



2. 보험 산업 생존 전략 (Warm Tech + Touch)

따뜻한 기술(Tech)과 인간적 소통(Touch)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

감사합니다.